

서울시 문화다양성 시민인식지표는 문화표현의 자유·타인 수용성에 기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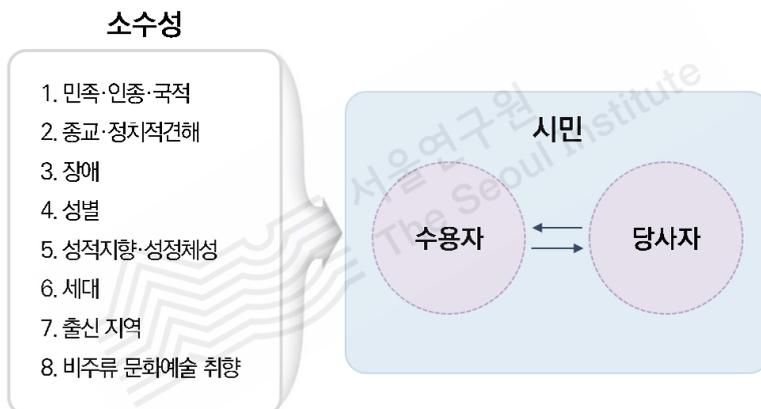
문화다양성 정책 추진 시 문화다양성 시민인식조사·지표개발이 ‘먼저’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은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핵심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유네스코는 2011년 「세계문화다양성 선언」에서 문화다양성이 모든 인류의 자산이자 개인의 권리이며 창조성의 원천이라고 천명하였다. 우리나라는 2010년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 비준 이후 기존의 다문화 정책을 전환하기 시작하여, 2014년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과 함께 문화다양성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서울시는 다양한 인적 구성과 집단으로 분화하는 다양성 사회에 진입하고 있다. 서울은 세계 여러 도시와 교류가 활발하고 사회경제적 구성이 다양한 만큼 문화적으로 다양한 배경의 인구집단과 문화가 활발히 나타나는 국제도시로 역동성을 가지는 반면, 문화다양성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수많은 갈등 상황으로 표출되고 있다. 서로 다른 집단과 가치에 대한 불인정은 충돌과 갈등을 심화시킬 뿐이며,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이루려면 문화다양성 증진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서울시는 2017년 「서울특별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문화다양성 정책 추진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이 조례는 모든 사회구성원은 문화표현의 자유와 권리를 가지며, 다른 사회구성원의 다양한 문화표현을 존중하고 문화적 관용을 가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의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이 역점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시점에서, 관련 기본계획과 사업 추진을 위한 기초조사인 서울시 문화다양성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실태조사는 크게 문화다양성 관련 정책환경과 시민인식조사로 구분된다. 이 연구는 특히 시민인식조사 실시가 우선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서울시 문화다양성 시민인식조사 시행을 위한 지표개발과 시범조사 실시를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서울시 문화다양성 인식지표체계, 소수성 수용자·당사자로 시민 설정

현재 우리나라의 문화다양성 실태조사는 중앙정부와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다. 기존 조사는 수용자로 국민(시민)을, 대상자로 소수자를 설정하여 일반국민의 소수자에 대한 포용도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가 시민을 수용자이자 당사자로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시민 개개인이 모두 자신만의 문화표현을 가지고 있으며, 각자의 문화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문화다양성 정책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서울시 문화다양성 인식지표체계는 시민을 소수성의 수용자이자 소수성을 갖는 당사자로 설정하여 구축하였다. 또한 소수성은 우리연구원에서 선행되었던 라도삼 외(2018)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민족인종국적, 종교·정치적 견해, 장애, 성별, 성적지향·성정체성, 세대(연령), 출신지역, 비주류 문화예술 취향 등 8개로 분류하였다.



[그림 1] 서울시 문화다양성 인식지표체계의 대상

서울시 문화다양성 인식지표 항목, 서울시민 문화표현에 초점된 설계

‘서울시민 문화다양성 인식지표’는 크게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으로 구분하였다. 개인적 차원은 문화다양성에 관한 자기 평가와 경험에 대한 판단이고, 사회적 차원은 서울시민과 서울시 정책에 대한 판단이다.

개인적 차원의 지표항목은 내가 문화다양성을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인지도’, 내가 다른 집단의 문화표현을 얼마나 수용하는지를 확인하는 ‘수용도’, 내가

문화표현을 이유로 차별받은 경험이 얼마나 있고 어떻게 대응하는지 확인하는 ‘차별 경험도’, 나만의 비주류 문화표현 보유여부와 그 비주류 문화표현을 얼마나 자유롭게 표현하는지를 확인하는 ‘비주류 문화표현 보유도’ 등 4가지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사회적 차원의 지표항목은 서울시민이 다른 집단의 문화표현을 얼마나 수용하고 서울시에서 문화다양성이 얼마나 구현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서울시 문화다양성 수용도’와 서울시 문화다양성 정책 중요도와 문화다양성 사업별 필요도를 확인하는 ‘문화다양성 정책 중요도’ 등 2가지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확정된 인식지표체계는 [표 1]과 같다.

[표 1] 서울시 문화다양성 인식지표 체계

구분	지표항목		세부내용
서울시민 문화다양성 인식	개인적 차원	인지도	문화다양성 인지도
			문화다양성 연관대상
		수용도	문화다양성 수용도
			다른 집단의 문화표현에 대한 나의 존중도
			다른 집단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정도
		차별 경험도	문화표현을 이유로 차별받은 경험도(온라인, 오프라인)
			문화표현을 이유로 내가 차별받았을 때 대응도
			문화표현을 이유로 다른 사람이 차별받았을 때 대응도
	다른 문화표현에 대한 거부도		
	비주류 문화표현 보유도	비주류 문화표현 보유율	
		비주류 문화표현의 표현도	
		나의 비주류 문화표현에 대한 서울시민들의 존중도	
	사회적 차원	서울시 문화다양성 수용도	다른 집단의 문화표현에 대한 서울시민의 존중도
			서울시의 문화다양성 구현도
문화다양성 정책 중요도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이 서울시에 미치는 영향도	
		서울시 문화다양성 정책 중요도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사업별 필요도	

서울시 문화다양성 인식지표의 가장 큰 특징은 서울시민의 ‘문화표현’에 초점을 둔 것이다. 시민을 수용자이자 당사자로 보고 서울시민이 다른 집단의 ‘문화표현’을 얼마나 존중하는지, 그리고 자신의 문화를 얼마나 자유롭게 표현하는지 등 항목을 세분화하여 접근하였다. 또한 시민의 문화다양성 수용도를 다차원적으로 파악할 목적으로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으로 세분화하였고, 개인의 문화다양성 수용도는 인지적 수용도와 실제 수용도(사회적 거리감)를 구분하여 구성하였다.

서울시민의 문화다양성 인식 시범조사는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로 이루어졌다. 다만, 표본설정의 한계로 소수자 집단의 문화표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소수자 집단별 당사자와 전문가(활동가)를 중심으로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서울시민, 문화다양성 인지도 매우 높지만 소수문화 수용도는 낮아

서울시민의 문화다양성 인지도는 매우 높은 편(84.9%가 인지)이지만, 문화다양성의 대상을 민족인종국가에 한정하여 인식하고, 그 외 성적지향성정체성, 전통문화, 장애, 소득 등의 요인은 문화다양성의 요소로 인식하지 않았다. 또한 서울시민 10명 중 8명은 다른 문화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응답하는 등 인식 차원에서는 문화다양성 수용도가 높았지만, 문화적 배경이 다른 집단(특히 성소수자집단, 정치적 견해가 다른 사람, 북한이탈주민, 이주노동자 등)에게는 사회적 거리감을 높게 표출하고 있어 실제 수용도는 낮음을 보여주었다. 이처럼 문화다양성 인식 차원의 수용도와 실제 수용도 간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문화다양성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감수성의 부재가 원인으로 보인다. 소수자 심층인터뷰에 따르면, 우리 사회는 아직 문화다양성이 충분히 존중받거나 발현되지 못하는 환경이며, 소수집단이 어떠한 지점에서 차별받고 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감수성이 부재한 상황이라고 하였다.

서울시민의 21.2%는 주류에 속하지 않는 문화표현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본인이 문화적 소수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문화표현에 더욱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그 이유는 사회적 분위기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었다. 심층인터뷰 과정에서 성소수자, 중국동포, 베트남 이주여성 등이 무시와 차별을 피하려고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는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서울시의 문화다양성 구현 수준, 다른 도시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편

정부 실태조사에서 응답자의 25.5%가 '우리 사회의 문화다양성 구현 수준'이 긍정적이라고 답변한 반면, 이번 조사에서는 서울시민의 57.1%가 '서울시 문화다양성 구현 수준'에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소수자 집단 심층인터뷰에서도 서울시의 문화다양성

구현 수준이 절대적으로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지만, 다른 도시보다 상대적으로 문화 다양성에 대한 인식이 높은 편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그 요인으로는 실제로 사회 구성원이 다양한 점, 수도로서의 지위, 세계화 속에서 국제적으로 요구되는 인권 수준 등에 더 많이 노출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었다.

서울시민은 서울시의 문화다양성 구현수준을 높게 평가했지만, ‘소수자 권리와 권익이 충분히 보장된다’는 항목에는 34.7%가, ‘사회문화적 차이가 차별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문항에는 34.5%만 긍정 응답을 하였다. 이는 문화다양성 구현 수준보다 제도적 구현이 미흡함을 보여주고 있다.

서울시민의 69.4%는 서울시정에 문화다양성 정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문화다양성의 가치 확산은 포용적 사회 발전과 시민의 표현의 자유 확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 문화다양성 정책에서 가장 필요한 정책은 문화다양성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 소수자 접근을 위한 문화시설 개선, 차별 및 혐오표현 규제 정책 등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시범조사 결과 보완해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연속적으로 실행할 필요

서울시 문화다양성 실태조사는 시민인식조사와 정책환경조사의 두 축으로 구성할 수 있다. 이 연구는 두 축 중 시민인식조사에 초점을 맞춰 서울시민의 문화다양성 인식지표를 개발하고 시범조사를 실시하였다. 문화다양성 시민인식 시범조사 결과,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다음과 같이 도출되었다.

첫째, 8개로 구분한 문화다양성 범주와 관련하여 ‘종교·정치적 견해’는 분리가 필요하다. 사회적 거리감 조사 결과, 서울시민은 ‘종교적 견해’와 ‘정치적 견해’를 구분하여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향후 조사에서는 범주를 분리하여 조사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8개 범주 중 ‘비주류 문화예술 취향’도 재논의가 필요하다. 델파이 조사와 자문회의에서 ‘비주류 문화예술 취향’을 예술로 한정해서 봐야 한다는 주장과 개인의 취향영역으로 확대해서 봐야 한다는 주장으로 갈렸던 범주로, 추가 논의가 필요한 영역이다.

둘째, 인식조사 표본은 소수문화집단을 포함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서울시민 문화다양성 인식조사 지표는 일반시민과 소수문화집단을 모두 대상으로 하여 개발된 지표이다. 하지만 이번 시범조사에서는 예산 등의 제약으로 표본설계과정에서 소수문화집단

을 별도로 반영하지 못했다. 일반시민과 소수문화집단을 나누어 표본을 설정할 경우 문화다양성 인식, 차별경험, 비주류 문화표현의 표현도 등의 항목에서 두 집단 간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설문방식으로 실시되는 서울시민인식조사 외 별도의 소수문화집단에 대한 심층 조사가 필요하다. 설문조사만으로는 소수문화집단이 경험하는 구체적인 문화다양성 인식과 침해사례 등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시범조사에서는 예산이나 코로나19 사태 등 상황적 이유로 민족·인종·국가, 장애, 성별(젠더), 성적지향·성정체성 등 4개 대상만 조사를 실시했지만, 앞으로 문화다양성 8개 범주 모두에 대해 조사가 필요하다.

문화다양성 실태조사의 다른 한 축인 정책환경조사와 관련해서는 서울시 문화다양성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이에 기초한 정책과 여건지표를 개발하여 조사·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서울시의 정책환경조사는 중앙정부의 실태조사에 대응하는 체계로 여러 부서에서 시행되는 사업을 행정적으로 취합하는 수준에서 실시되고 있다. 문화다양성과 관련된 기본적 정책방향 없이 관련 사업을 취합하는 방식은 조사 대상이 너무 광범위해지고 조사자에 따라 기준이 달라져 실효성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문화다양성 실태조사가 주기성과 연속성을 확보하려면 서울시 문화다양성 조례에 따라 문화다양성 정책의 총괄기구인 ‘문화다양성위원회’ 설치가 선행되어야 한다. ‘문화다양성위원회’는 문화다양성 정책이 일관된 목표를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문화다양성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주기적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등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